

2016 국가9급

해설 : 방성은교수

<총 평>

- 이번 국가9급 시험은 선택제로 전환된 이후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얇은 책과 얇은 강의로 회독수를 늘리는 공부를 한 수험생은 큰 낭패를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회를 공부하더라도 이해중심으로 깊이 있는 강의와 공부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 내용을 보면 9번 연락역할 담당자, 11번 조직시민행동이론, 18번 수입대체경비, 20번 국제정수액 비교는 상당히 깊이 있는 문제입니다. 19번 사무배분 방식의 경우 제한적 열거방식과 예시적 열거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 2편이 5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1편은 적게 출제되었으며 7편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2편에서 정책과정 주도자 모형에서 2문제, 4편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직위분류제가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편별로 문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 ④ 정부실패는 정부의 독점적 성격과 관료제 특유의 성격으로 발생하기도 한다.(2016 비타민 행정학 55페이지) 답 : ④

(2) 정부실패의 공급측면 특성

⑭ 관료제의 병리 : 번문욕례(red-tape),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동조과잉과 목표수단의 대치, 할거주의(割據主義, sectionalism)와 같은 정부관료제의 역기능도 정부실패를 야기한다.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① 가외성(redundancy)

- ② 합리성(rationality)
- ③ 효율성(efficiency)
- ④ 책무성(accountability)

해설 : 예시문의 내용은 ① 가외성(redundancy)에 해당된다. 1960년대 란다우(M. Landau)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던 가외성(加外性)을 행정학에 도입하였다. 가외성은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과 구조를 중복시키는 것이다. 현대 행정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행정체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짐으로써 가외성이 중시되었다.(2016 비타민행정학 100페이지) 답 : ①

11. 가외성(redundancy) - 2016 비타민행정학 100페이지

(2) 가외성의 배경 : 초기 행정학에서는 가외성을 중첩, 중복으로 여기고 능률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아 가외성이 영(0)인 상태를 이상적으로 보았으나, 현대 행정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행정체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짐으로써 가외성이 중시되었다.

(3) 가외성의 특징

① 중첩성(重疊性, overlapping) : 어떤 문제나 과업을 여러 기관들이 상호의존성을 가지면서 이를 중첩적으로 공동관리하며 함께 협력하면서 수행하는 것이다. ☐ 재난발생 시(재난관리업무) - 국민안전처, 자치단체, 경찰청 등이 함께 대처

② 반복성(反復性, duplication, 중복성) : 동일한 과업을 별도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 사이버 수사 업무 - 경찰청, 검찰청 수사대가 별도 수행

③ 등전위성(等轉位性, equi-potentiality, 동등잠재력) : 보조기능을 예비함으로써 주기관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조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 조명장치, 국무총리 권한대행 등

(4) 가외성의 효용(정당성)

① 조직의 신뢰성과 안정성 증진 : 가외성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3.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과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해설 : 티부가설은 주민들이 기존 지역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느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를 하므로 공공재에 대한 주민 선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②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주민들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편익을 볼 수 있으므로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전제로 한다.(2016 비타민행정학 154페이지) 답 : ②

㉠ 티보가설의 전제조건 - 2016 비타민행정학 154페이지

㉠ 완전한 정보(perfect information) : 모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조세정책에 대한 정보가 주민에게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이 발달되면 정보획득을 위한 거래비용이 감소되므로 티보가설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 완전한 이동성(perfect mobility) : 시민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교통이 발달되면 생활광역화로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해지므로 티보가설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 다수의 지방정부 : 상이한 재정정책을 추구하는,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 외부효과 부존재 :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가 없다. 즉, 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지역주민의 후생에만 영향을 미친다.

㉤ 규모의 경제 부존재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규모가 클수록

록(거주자가 많아질수록) 공공재 생산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가장 큰 지방정부가 최선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경쟁체제가 성립될 수 없다.

㉑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 모든 지방정부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인 생산요소를 가지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각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하게 된다.

㉒ 최적규모의 추구 : 모든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한다. 최적규모보다 작은 지방정부는 평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주민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반면, 최적규모보다 큰 지방정부는 오히려 주민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4.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 ㄱ, ㄴ이 옳고 ㄷ은 옳지 않다.

ㄱ(O) : 이익집단론의 주요 내용은 잠재이익집단론(현존하지 않지만 이익 침해시 조직화가능성이 있는 집단)과 중복회원론(구성원은 여러 집단에 중복소속)은 특수이익집단의 전횡이 방지된다는 근거로서 정치지도자가 잠재이익집단을 고려한 결정을 하게 되며 구성원이 특정 집단에만 속해있지 않으므로 정치체제가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ㄴ(O) : 신다원주의론은 기업의 특권적 지위와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는 이론으로서 기업은 주민의 고용물을 높이고 조세를 많이 납부하므로 정부는 기업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신다원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X) :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관료조직), 이익집단 3자가 폐쇄적 은밀한 결탁을 하고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론이다. 정당은 해당되지 않는다.(2016 비타민행정학 212, 214, 215페이지)

답 : ②

(2) 집단과정이론 - 이익집단론(利益集團論, 1951) - 2016 비타민행정학 212페이지

① 의의 : 벤틀리(Bentley)와 트루먼(Truman)은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정치체제는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이라는 2가지 자기수정 메커니즘에 의하여 특수이익(집단)에 좌우되지 않고 다양한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② 근거

㉑ 잠재이익집단론 : 정책결정자는 항상 잠재집단(potential group)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활동적 소수(active minority)의 특수이익이 정책을 지나치게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㉒ 중복회원론(multiple membership) : 이익집단의 구성원은 하나의 집단에만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에 중복 소속되어 있으므로 특정한 소속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신다원론의 내용 - 2016 비타민행정학 214페이지

① 기업의 특권적 지위 : 신다원론은 고전적 다원주의가 이익집단 가운데 기업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제대로 고

려하지 못했음을 비판하고, 현실 정책과정에서 기업의 특권적 지위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한다. 정부를 유지할 과세(課稅)와 정부고위층의 재선(再選)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1) 하위정부의 의의 - 2016 비타민행정학 215페이지

- ①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의 동태적 상호작용 : 하위정부모형은 정태적인 기존 제도분석과 달리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 간의 상호 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선진국 모형 : 하위정부모형은 미국에서 최초로 제시된 모형으로서 이익집단의 투입기능이 강한 선진국의 정책과정을 설명한다.
- ③ 삼자의 은밀한 결탁 : 정책과정의 비공식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참여자인 의회 상임위원회(고참의원), 행정부처(관료조직, 고위관료), 이 3자가 은밀하게 결탁하여 하위체제를 형성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 현상을 연구한 이론이다(Pross, Ripley와 Franklin).

5.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해설 : ④ 이슈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경쟁관계로서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정책커뮤니티(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로서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과 이해를 공유하며 협력을 통하여 도출된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2016 비타민행정학 220페이지) 답 : ④

* 이슈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 - 2016 비타민행정학 220페이지

구 분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정책 행위자	• 다양한 행위자, 이슈에 따라 수시로 변동 (이익집단, 전문가, 언론, 비조직화된 개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 ⇒ 개방적 · 불안정적 · 유동적 • 경계의 개방성 높음	• 공식적 · 조직화된 행위자에 한정 (공무원, 연구원, 교수, 의원 등) ⇒ 폐쇄적 · 안정적 · 지속적 * 조합주의처럼 제도화된 관계에는 이르지 못함 • 경계의 개방성 낮음
관료역할	• 우월적 지위×(쟁점에 따라 방관자 또는 주도자, 관료 재량영역 축소)	• 우월적 지위○(시민참여에도 불구하고, 관료가 주도)
상호 관계	• 상호경쟁적, 상호의존성 약함 • 권력의 편차가 심함, 연합형성 전략, <u>갈등 존재</u> • negative sum game	• 상호협력적, 상호의존성 강함 • 비교적 균등한 권력 • positive sum game
관련 이론	• 다원론(경쟁, 관료의 소극적 역할)	• 조합주의(협력, 관료의 적극적 역할)
참여의 목적	• 자기이익 극대화(이해 공유도 낮음) * 이슈의 성격에 따라 이합집산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공유와 협조 (이해 공유도 높음)
유형의 구조화	• 개별 행위자들로서 특별한 구조가 미형성 • 예측가능성 낮음	• 빈번한 상호작용 ⇒ 안정된 구조적 관계로 유형화 • 예측가능성 높음
자원배분	• 자원보유 면에서 격차가 존재 • 기본관계 : 교환관계가 아닌 자문수준	•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고 있음 • 기본관계 : 교환관계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 변경 많음(예측 곤란)	처음의 정책내용대로 정책결정(예측 용이)
정책집행	결정된 정책내용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결정된 정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6. 제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설 : 미국의 집단 심리학자 제니스(I. Janis, 1977)는 최악의 정책결과로 평가되는 미국의 ‘쿠바 침공 실패사건’을 분석하고 집단사고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집단사고란 구성원들의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집단의 왜곡된 사고양식으로서 합의에 대한 압력으로 인하여 비판적 사고가 억제됨으로써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집단사고에 빠지게 된다. ③은 집단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상호점검(크로스체크)을 위한 대책이다.(2016 비타민행정학 266페이지) 답 : ④

(4) 집단의사결정의 극단적 문제 - 집단사고(Group Think)

- ① 의의 : 미국의 집단 심리학자 제니스(I. Janis, 1977)는 최악의 정책결과로 평가되는 미국의 ‘쿠바 침공 실패사건’을 분석하고 집단사고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집단사고란 구성원들의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켜 합리적인

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집단의 왜곡된 사고양식으로서 합의에 대한 압력으로 인하여 <u>비판적 사고가 억제됨으로써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되는 현상</u>을 의미한다. <u>미국의 쿠바 피그만 침공 실패 사건</u> ② 발생원인 : ㉠ 개인의 집단에의 소속심리 및 과도한 충성, ㉡ 권위주의적 리더의 존재와 의사결정의 집권적 구조 및 의사결정 규칙의 부재, ㉢ 외부위협이 잠재해 있다는 동일한 인식, ㉣ 시간적 제약, ㉤ 집단구성원의 동질성, ㉥ 전문가집단의 정보와 비판적 평가로부터의 차단 등으로 발생한다. ③ 증상 : ㉦ 참여자들의 자기과신(불패신화에 대한 믿음)과 도덕성의 환상(가장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므로 비판받아서 안 된다는 인식), 무결점의 환상(지나친 낙관주의로 고도의 위험성을 쉽게 받아들임), ㉧ 자기 집단만을 합리화하려는 폐쇄적 인식, ㉨ 만장일치 결정의 선호, ㉩ 강한 집단동조성과 집단규범의 내재화, ㉪ 반대대의견자에 대한 압력, ㉫ 심리적 방어기제의 형성 등 ④ 의사결정의 특징 : ㉬ 대안의 불완전한 조사, ㉭ 목표의 불완전한 조사, ㉮ 대안이 초래할 위험성 검토의 실패, ㉯ 기각된 대안의 재검토 실패, ㉰ 빈약한 정보탐색, ㉱ 정보처리에 있어서의 선택적 편견, ㉲ 상황적응적 계획 수립의 실패, ㉳ 부정적 환류의 회피, ㉴ 경고적인 암시들(warning signals)의 무시, ㉵ 자체검열, ㉶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적 경호역할’ 수행, ㉷ 외부집단 의견 미과악 등

7.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① 상실요인(mortality)
- ② 회귀요인(regression)
- ③ 역사요인(history)
- ④ 검사요인(testing)

해설 : ③ 예시문의 내용은 유류가격 급등이라는 뜻밖의 사건으로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가 왜곡된 역사요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역사요인(사건효과)는 뜻밖의 사건 발생으로 내적 타당성이 저해되는 요인이다.(2016 비타민행정학 339페이지) 답 : ③

㉠ 사건효과 : 2016 비타민행정학 339페이지 실험자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특정한 사건의 우연한 발생으로 실험의 효과가 왜곡되는 현상으로서 <u>역사요인</u>이라고도 한다(단속적 요인). <u>㉡ 상한 우유로 집단식중독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우유급식효과가 현저히 떨어짐, ㉢ 공장폐수정화시설의 설치 정책으로 1년 후 강의 오염이 감소되었을 때, 지난해부터 극심한 경기침체로 공장의 폐업이 증가했다면 오염감소는 경기침체라는 사건효과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u>

8.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해설 : ③ 정책지지(옹호)연합모형은 정책하위체제에는 신념을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이 있으며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와의 상호작용 및 정책학습을 통하여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는 변

동모형이다.(2016 비타민행정학 350페이지). 답 : ③

⑤ 정책지지연합과 중개자 - 2016 비타민행정학 350페이지

- ① 정책지지연합 : ④ 정책하위체제에는 정책지지연합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특정신념을 공유하고 공·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며 그들의 신념을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⑥ 각각의 정책지지연합들은 공통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정책신념을 기초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⑦ 이들의 정책변동 능력은 보유자금, 전문지식, 지지자, 법적 권한 등 자원의 정도에 달려 있다.
- ① 중개자 : 정책지지연합이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신념체계를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정책대안들은 제3자인 정책중개자들(정치인, 관료, 시민단체 등)에 의하여 중재된다.

9.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 ②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 ③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 ④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해설 :

- ①(X) : 연락 역할 담당자는 조직이 여러 부서로 세분화되어 부서 간 의사전달 무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때 종적 경로를 거치지 않고 부서 간의 직접적인 의사전달로 효과적인 조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연락 역할 담당자는 공식적인 권한이 없지만 비공식적인 권한을 상당히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업무 수행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이창원, Mintzberg)
- ②(O) : 태스크포스는 수평적 조정기제로서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 ③(O) :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과 관리자 집단을 연결하는 연결핀 역할을 하게 된다.
- ④(O) : 차관회의는 부처 조직 간 수평적 조정 역할을 한다.(2016 비타민행정학 368페이지)

답 : ①

㉮ 기타 조정방안 - 2016 비타민행정학 368페이지

: 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② 목표의 명확화와 참여에 의한 관리(MBO), ③ 조정전담기구에 의한 조정(국무조정실, 국무회의, 차관회의, 당정협의회 등), ④ 구조적 개편(부처통합, 직무확장 등), ⑤ 계획과 환류, ⑥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수평적 조정을 담당할 정규직위), ⑦ 부서 간 또는 부처간 수평적 조정을 위한 임시작업단(Task Force)·사업팀(Project Team) 구성, ⑧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교환 등

⑥ 연결핀구조(중복작업 집단체제) - 2016 비타민행정학 486페이지

- ㉠ 의의 : Likert는 조직의 적응력과 조정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연결핀(linking - pin)구조를 제시하였다. 연결핀이란 자신의 집단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짐과 동시에 상위의 집단에서는 단순한 구성원으로서 소속된다는 것이다.
- ㉡ 연결핀과 리더십의 효과성 : 리더의 '연결핀' 역할이 효과적일 때 리더십의 효과성이 제고된다. 즉, 리더가 부하뿐만 아니라 상위 계층 및 동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리더가 관리하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단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10.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 ②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③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④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 행동에 속한다.

해설 :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이란 공식적 역할과 관련된 의무나 그에 따른 정형화된 계약이나 보상체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지 않지만 조직 전반에 도움을 주려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행위로서 개인 본연의 직무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조직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직무 외 행동이다. ② 구성원들이 여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자 역할에 대하여 모호하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답 : ②

*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ateman & Organ(1983))

1. 의미 :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이란 공식적 역할과 관련된 의무나 그에 따른 정형화된 계약이나 보상체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지 않지만 조직 전반에 도움을 주려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행위로서 개인 본연의 직무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조직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직무 외 행동이다.

2. 조직시민행동의 5가지 하위 차원 : 오건은 조직 시민 행동을 이타주의(altruism), 성실성(conscientiousness), 스포츠맨십(sportsmanship), 예의(courtesy), 시민 덕목(civic virtue) 등 다섯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했다.

(1) 이타성 : 직무상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한 구성원이 조직 내 업무나 문제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을 도와주려는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조직 내 행동을 일컫는다. 이타주의에는 결근한 동료를 돕는다든지 작업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2) 성실성(양심성) : 조직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실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스포츠정신 : 조직 내에서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해 불평이나 비난을 하는 대신, 가능하면 조직 생활의 고충이나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한다.

(4) 예의성 :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과 직무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구성원들 간에 정보 등을 공유하여 문제 자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5) 시민성(시민 덕목) : 조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직 내의 활동에 몰입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3. 조직시민행동의 선행 조건

(1) 직무 만족 :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만족할수록, 구성원이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2) 정서적 몰입 : 조직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자신의 조직과 일에 대해 몰입하고 있을수록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 공정성 :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조직 내의 공정성이 높을수록, 즉 자신이 조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4) 상사와의 관계 : 조직 구성원이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할 때 조직 시민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직 구성원이 상사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조직 시민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전염성 : 집단 구성원들이 대체로 조직 시민 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집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5) 성격 : 조직 시민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책임감, 외향성, 긍정 정서 및 이타주의 요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적 효과

(1) 조직 내 다양한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조직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단합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3) 최상의 인재를 모으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최상의 인재들은 일하기 좋은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조직 시민 행동은 자신들의 조직을 일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5.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효과

(1) 조직 구성원이 타인이 할 일까지 떠맡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과부하가 발생되어 탈진(burn-out)하게 된다.

(2) 다중역할 요구(multiple role demand)가 갈등과 긴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11.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 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해설 :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다양성(Variety,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속도(Velocity, 빠른 생성속도), 규모(Volume, 초대용량의 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정형적, 비정형적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2106 비타민행정학 616페이지) 답 : ③

4. 빅데이터(Big Data) : 2106 비타민행정학 616페이지

과거 아날로그 데이터에 비하여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정형적인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등 비정형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로서 초대용량의 데이터 양, 다양한 형태, 빠른 생성 속도, 가치(value)를 특징으로 한다.

12. 고위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해설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정부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제도이다.

②(O) : 우리나라와 같은 계급제 국가는 계급제적 요소(폐쇄형)가 제약되는 반면, 미국과 같은 직위분

류제 국가는 직위분류제적 요소(경직성)가 제약된다.

- ③(X) :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다.(2016 비
타민행정학 569페이지) 답 : ③

(2) 임용 및 인사관리 - 2016 비타민행정학 569페이지

: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 승진임용,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 ① 임용권 :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강등·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

1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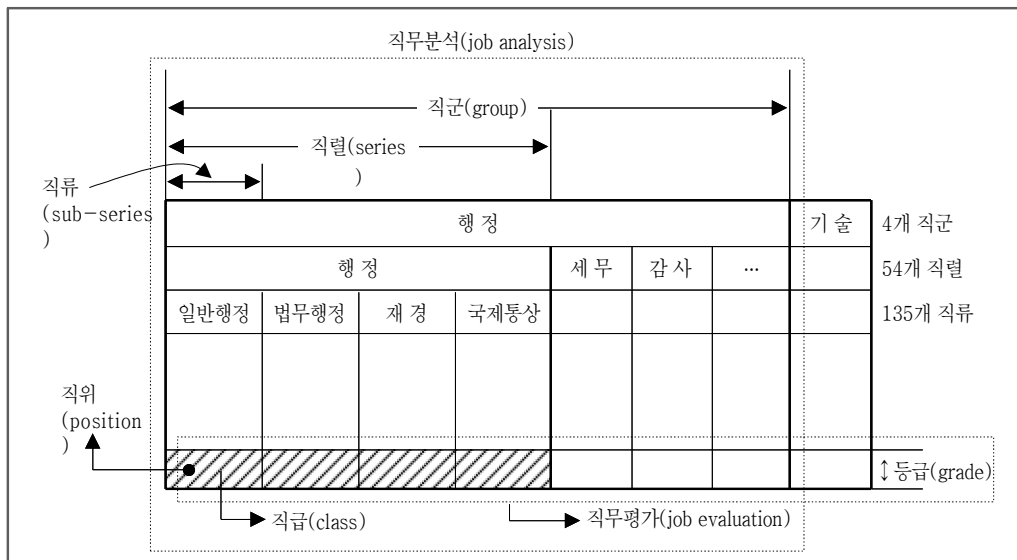
-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해설 :

- ①(X) :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한 것은 직급이다.
②(X) : 직렬의 군은 직군이다.
③(O) : 직렬은 직군을 세분화한 것으로서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의
집합이다.
④(X) :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은 직류이다.(2106 비타민행정학 593페이지)
답 : ③

2. 직위분류제의 구조 - 2106 비타민행정학 593페이지

■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분류제의 구조 ■



- (1)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일의 내용과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직위는 직무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 □○ 담당
(2) 등급(grade) : 직렬과 직군을 초월하여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지만, 그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하여 동
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군으로서 계급제의 계급에 해당된다. 인사업무에 관한 직급과

- 예산업무에 관한 직급이 직무의 성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책임수준과 곤란성의 정도가 대등하다면 같은 등급에 배정된다. ☐ 9급 서기보 전체
- (3) 직급(class) : 직무의 종류, 곤란도(난이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서 수평적인 등급과 수직적인 직렬이 교차하는 공통부분이다. 임용자격, 임용시험, 보수 등 인사관리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 행정 9급, 세무 9급 등
- (4) 직류(sub-series)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서 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직렬을 좀 더 세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선발시험의 과목과 응시자격에 대한 기준이다. ☐ 행정직렬 내의 일반행정직류와 재정직류는 시험과목 등이 다름.
- (5)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난이도)와 책임도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력관리기준이 된다. ☐ 행정직렬, 세무직렬 등
- ☐ 전보와 전직 : 전보는 동일직급 내의 이동이고, 전직은 직렬 간 이동
- (6) 직군(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 행정직군, 기술직군

14.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A. 서열법(job ranking)
B. 분류법(classification)
C. 점수법(point method)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 ㄱ.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 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 ㄷ.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 ㄹ.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ㄷ	ㄴ	ㄱ	ㄹ
④	ㄷ	ㄱ	ㄹ	ㄴ

해설 :

- A. 서열법(job ranking) : ㄷ. 서열법은 비계량적으로 직무를 비교하는 상대평가로서 직무를 요소로 구분하지 않는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 B. 분류법(classification) : ㄱ. 분류법은 비계량적으로 직무를 등급표에 배치시키는 절대평가로서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 C. 점수법(point method) : 르. 점수법은 계량적으로 직무를 등급표에 배치시키는 절대평가로서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 ㄴ. 요소비교법은 계량적으로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상대평가로서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2016 비타민행정학 598~600페이지)

답 : ④

* 직무평가기법 - 2016 비타민행정학 598~600페이지		
구분	직무와 직무 간 상대가치 비교(상대평가)	직무와 등급표 비교(절대평가)
종합적·비계량적 방법 (직무요인 미고려)	1. 서열법	2. 분류법
분석적·계량적 방법 (직무요인 고려)	4. 요소비교법	3. 점수법

1. 서열법(ranking method)

① 의의 : 가장 간단하고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각 직위가 가지고 있는 직무의 곤란도나 책임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직위 간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즉, 직무의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각 직무의 상대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열을 결정하는 주관적인 방법이다. 서열법은 직무평가의 담당자가 대상조직의 직무를 모두 잘 파악하고 있고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2. 분류법(classification method)

① 의의 : 서열법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서열법과 같이 직무요소에 대한 분석 없이 직무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등급분류 기준을 정의한 등급기준표(표1)를 미리 정해놓고 각 직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특정등급에 배치하여 그 등급에 해당되는 모든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본급을 정하는 방법이다. 정부와 같은 대규모 조직에 사용된다.

3. 점수법(point method)

① 의의 : 비계량적인 서열법이나 분류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각 직위의 직무요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총점을 구한 후 등급기준표에 따라 배치하는 방법이다. 분류법과 같이 등급기준표가 사용되지만 점수법은 등급의 폭이 숫자로 표시되고 직위의 점수에 따라 직무급을 결정하게 되며 계량적인 척도의 활용과 이로 인한 평가의 명료성 등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요소비교법(factor-comparison method)

① 의의 : 가장 늦게 고안된 것으로서 점수법처럼 평가할 직위에 공통되는 평가요소를 정하고 조직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직무(중심직무, key position)를 선정한 후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와 기준직무의 평가요소들을 상호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금전적·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15.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 ③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 ④ 공무원행동강령은 시대적 윤리경향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의 하위형식(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2016 비타민행정학 690페이지) 답 : ④

- ㉠ 공직자 10대 준수사항(1999. 국무총리훈령) : 선언적·포괄적이어서 현실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정책실패 사례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 ㉡ 공무원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2003. 대통령령)
- ㉢ 의의 :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참여정부에서 제정한 행동강령으로서 각 행정기관 별로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 ㉣ 공무원행동강령(2005. 12. 대통령령)
- ㉤ 의의 : 공무원 청렴유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 ㉥ 주요 내용
- ㉦ 직무관련공무원 범위의 구체화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급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 알선·청탁 등의 금지 강화 :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는 물론 공무원 및 공직유관 단체의 직원 등에게도 소개하지 못하도록 함

16.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해설 : ① 예시문은 회계연도 개시일(1. 1)까지 본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인 준예산의 내용이다. 한편 미국은 잠정예산이라고 한다.(2106 비타민행정학 2권 41페이지)
답 : ①

- ① 준예산(準豫算) - 2106 비타민행정학 2권 41페이지
- ㉠ 의의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특정한 법정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자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잠정적 예산제도로써, 국회의결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 연혁 : 우리나라에서는 제1공화국 때(1948~1960)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서 가예산을 채택하여 6·25 전쟁 휴전까지 거의 매년 사용(6회)하였으며, 1960년 4·19 직후 출범된 제2공화국 때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였다.
- ㉢ 중앙정부 : 아직까지 준예산을 편성한 예는 한 번도 없다.
- ㉣ 자치단체 : 부안군(2004), 성남시(2013), 동작구(2013), 경기도(2016)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마찰로 준예산을 편성하여 자치행정의 파행을 초래한 적이 있다.

17.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2016 비타민행정학 2권 113페이지) 답 : ②

㉠ 상임위와 예결위 - 2016 비타민행정학 2권 113페이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의 심의결과에 예결위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8.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상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 ㉠ | ㉡ |
|---|--------|-----------|
| ① | 수입대체경비 | 예산총계주의 원칙 |
| ② | 전대차관 | 예산총계주의 원칙 |
| ③ | 전대차관 | 예산 공개의 원칙 |
| ④ | 수입대체경비 | 예산 공개의 원칙 |

해설 :

- ①(O) : 수입대체경비에 해당되며 수입대체경비는 계상하지 않으므로 예산총계주의(완전성원칙)의 예외이다.
- ②(X) : 전대차관은 정부가 국내 실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으로서 자기신용만으로 차관도입이 어려운 정부산하기관을 위한 방식이다. 정부가 단순히 창구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예산에 계상할 실익이 없어 계상하지 않지만(예산총계주의 예외), 최종적 상환의무는 정부에게 있으며 정부가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근에는 전대차관 사례가 거의 없다.(2016 비타민행정학 2권 128페이지) 답 : ①

④ 수입대체경비(收入代替經費) - 2016 비타민행정학 2권 128페이지

㉠ 의의 : 용역 및 시설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자체수입으로 관련 경비를 국회의결 없이도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경비이다.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는 경비이다. 즉, 경비의 성질상 특정한 지출이 직접적인 수입을 수반하는 경우 해당 연도 수입의 한도 내에서 해당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이며 국회의 사전의결이 불필요하다. 통일성원칙(국고통일주의), 완전성 원칙(예산총계주의),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이다.

㉡ 대상업무 : 국가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혜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와 수입범위 내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등기소의 등·초본 발행경비(대법원), ㉡ 여권발급경비(외교부), ㉢ 대학입시경비(교육부), ㉣ 위탁시험연구비(각 시험연구기관) 등이 그 예이다.

19.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해설 : ②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로서 제한적 열거방식(열거한 예만 해당)이 아닌, 예시적 열거방식(열거한 것 이외에도 해당)으로 사무를 배분하고 있다.(2016 비타민행정학 237페이지) 답 : ②

(3) 절충적 수권방식 - 2016 비타민행정학 237페이지

- ① 의의 : 개별적 수권방식의 단점(경직성)과 포괄적 수권방식의 단점(사무구분의 모호성과 중앙정부의 간섭)을 보완한 방식으로서 사무를 예시하되, 모든 자치단체에 포괄되는 사무를 배분한다. 일본·우리나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② 우리나라의 규정
 - ㉠ 1988년 이전의 지방자치법 규정(포괄적 수권방식) : 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무를 처리한다.
 - ㉡ 1988년 이후의 지방자치법 규정(포괄적 예시주의)
 - ㉠ 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 ㉡ 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각호와 같다[6개의 사무영역에 걸쳐 57개의 사무를 예시(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 ㉢ 단,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단서). ⇨ 단서조항으로 예시주의 정신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

20.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②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③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 ④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해설 : ④ 2014년 기준 국세는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순으로 징수액이 많다. 2015년에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징수액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57조1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2조7000억 원, 소득세 28조4000억 원, 법인세 13조4000억 원 순이다. 답 : ④